

UR타결 대응, 일대개혁 시급

정예 농업인력 양성기관으로 전문화 해야

취재구성/홍보부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 농고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아직도 농촌을 지키겠다는 “큰뜻”을 품고 농고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농업계 고등학교의 문제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이농현상, 수입개방에 따른 위기의식등 사회변화와 국가정책 그리고 국제동향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왔다.

더욱이 UR협상 타결이후 우리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시급해짐에 따라 교육내용과 학과개편 등을 포함한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전남 보성실고의 오용선(吳龍鄴)교장(60)은 도시로 진학시켜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인식과 일반적인 농업기피현상으로 전국의 농고가 존립자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농현상 등 농가인구 감소로 중학교 졸업자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보성군 전체의 중학교 졸업자 수가 고등학교 입학정원의 과반수를 조금 넘기 때문에 순수농고 뿐만아니라 인문, 상업계등 다른 계열도 실정은 비슷하다.

농업고등학교는 60년대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87년에 62개교이던 것이 92년에는 47개교로, 다시 93년에는 36개교로 급격히 줄었다.

이처럼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동안 농고는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동차과를 신설하는 등 순수농고 탈피를 위한 몸부림을 쳐왔다. 한예로 보성농고의 경우도 1993학년도부터 학교 이름을



보성실고로 바꾸어 자동차과를 신설하고 입학생 유치에 온갖 노력을 기울인 끝에 겨우 정원의 과반수를 넘기고 있다(표1).

결국 활로 모색을 위한 개편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농산제조과, 농촌지도과등은 대부분 폐과되고 자동차과, 농업전산과, 조원과, 유통정보과, 도시원예과, 농업중장비과 등이 새로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졸업후 취업난, 연계체제 마련 시급

현재 농고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졸업생 대부분이 농업과는 관계가 없는 업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한 학급에 많아야 2~3명만이 농사를 짓고 그 나머지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거나 무작정 도시로 흘러들어가는 추세이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농업을 기피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 가고 농업이 평생을 투자할 가치가 없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농사짓기 위해 농고에 입학한 경우는 전체의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표1. 보성실고의 과별 입학 현황(1학급 정원 = 48명)

학년도	농업과	원예과	축산과	농산재조과	임업과	농기계과	자동차과	합계	정원	비율(%)
1988	30	24	28	20	28	-	-	130	240	54.2
1989	34	15	24	20	16	-	-	109	240	45.4
1990	24	18	20	12	17	-	-	91	240	37.9
1991	26	21	22	17	-	-	-	86	192	44.8
1992	19	-	-	-	-	22	-	41	96	42.7
1993	-	16	-	-	-	20	65	101	192	52.6
1994	-	44	-	-	-	40	98	182	192	94.8

표2. 94학년도 광주·전남지역 농업계고교 지원현황

학교이름	학급수	정원	지원자수	지원율(%)
광주농고	6	282	350	124
구례농고	6	288	170	59
강진농고	6	280	161	57.5
호남원예고	4	192	121	63
금산중고	1	48	37	77
영광중고	2	96	42	45.7
곡성실고	2	96	84	87.5
광양실고	4	192	232	121
고흥실고	4	192	138	71.9
보성실고	2	96	61	63.5
함평실고	2	96	30	31.3
장성실고	5	240	113	47.1
진도실고	2	96	83	86.5
목포실고	2	96	79	82.3
계	48	2,290	1,701	74.2

났다.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계고교의 졸업생중 불과 9.4%(1990현재)만이 영농에 정착하고 있으며 동일계 취업은 2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졸업생의 30%정도만 졸업이후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정예농업인력 양성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고를

더욱 줄이고 우수영농인 양성만을 목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학생을 농업계 고등학교로 유치하기 위해 학비면제, 장학금지원, 병역특혜 등 조치와 함께 졸업후 영농종사자에 대한 특별지원 및 철저한 홍보등이 배풀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농업의 전반적인 위상이 너무 처져있기 때문에 일반계와 공고 및 상고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마지못해 어쩔수 없이 진학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학생들이 영농을 기피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농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는 심각하다. 농촌지도소, 농협, 축협등 유관기관은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농고출신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진로에 대한 보장이라는 「메리트」가 없는한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교사 역시 학생들의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농업과 관련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연계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농대에 진학할 수 있는

입학특전등을 주거나 농정관련 공무원과 정부투자 생산현장에서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시설은 현대화, 과목은 세분화 시켜야

농고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고를 현대화 하고 과목을 정보시대에 맞게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일본의 경우 430여개의 농고가 존재하고 개설된 학과수도 140여개과에 이르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정의 세분화는 곧 전문화내지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시설의 현대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상당수가 줄어든 학생수를 가지고 과거 학생수가 많았을때 갖춰진 농장을 실습농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비합리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줄어든 학생으로 과거의 넓은 농장을 시설현대화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과중한 노동력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신입생들의 농고진학 동기 유발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농업계고교 교사들이 불만인 것은 실습농장이 학생들의 실습위주의 농장이 아닌 이른바 「조수익」증대를 위한 수익농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있다.

조수익이란 농업경영에서 얻어진 총수입으로 재정회계법상 장학금, 일반사업비, 학교운영비로 충당되고 있어 비료나 농약등이 실험실습비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위한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습중 실수를 하여 농약을 잘못 살포했을 경우 교사가 결손책임을 지는 사례도 있다.

더욱이 기상재해 등으로 손실이 났을 경우 다음 해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소신을 가지고 실습을 시키기 보다는 수입을 올리는데 더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는 웃지못할 상황도 발생한다.

따라서 농고도 공고와 같이 순수실험실습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해 영농계획에서부터 재배, 사육, 판매, 경영분석까지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해 영농정착에 필요한 경영능력을 신장하도록 지도해야된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함께 교사들에 대한 연수 등으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농업을 살리고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식단을 책임질 영농후계자들을 육성할 교사들이 확고한 신념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져서는 농업의 장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기술농업, 품질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경기도의 경우 농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자연농육성 목표에서 고소득기업농을 위한 농상업인 육성으로 전환시킨다는 기본방침 아래 농업계 고등학교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인 농과, 축산과등에서 농업기기, 식품가공, 유통정보학과등 부가가치가 있는 학과로 점차 개편해 나아가기로 했다. 또 학교내의 실습체계도 노작(勞作)위주 실습체계에서 고소득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수경재배, 조직배양등 과학영농체제로 바뀌어나가기로 했다.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들은 사회·문화·복지측면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농촌과 농업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약정보**